

“고체연료 제한 해제, 민간 우주개발 골든타임 확보”

청와대는 29일 우주발사체의 고체 연료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우주 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변화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발표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우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보좌관은 우선 “어제 지침으로 인해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보좌관은 “추력·크기·제어·목표에 따라 액체 연료, 고체 연료, 하이브리드 등을 자유롭게 활용해 로켓 설계 가능해지는 데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운영이 가능하다”며 “비교적 단기간 내 개발이

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관련

“정부 주도→민간 협력 ‘뉴 스페이스 시대’ 경쟁력 확보
연료 자유롭게 활용… 단기간 개발 가능·민간 참여 용이
통신 등 소형 위성 산업 규모 확대 전망… 시장진입 기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보다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예시로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들의 등장거리 민간 발사체 시장 진입 ▲통신관측용 소형 위성 발사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승 등을 꼽았다.

또 박 보좌관은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부품 수가 적고 간단해 실리성이 높고 취급이 용이하다”며 “(우주발사체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발사체에도 어떤 위

성을 심는지 등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 이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보좌관은 소형 위성 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주목했다. 박 보좌관은 “요즘 우리가 5G 등 통신에서 신호를 잡을 때 통신 위성을 많이 올린다”며 “이런 다양한 종류의 통신위성, 관측위성, 데이터 수집 소형 위성은 지난 10년 간 연 1500여개 발사됐고 향후 10년간 약 8600개 발사가 전망된다. 시장으로는 1조 달러(규모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2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 보좌관은 “소형 위성 수요가 증가하고 소형 발사체 시장이 있는데 활용이 제한됐던 고체 연료 제한이 풀리면서 고체를 추진으로 하는 소형 발사체 개발시(관련) 시장의 (국내 기업의) 진입이 기

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2016년 창업한 ‘페리 지 항공우주’와 ‘이노스페이스’가 소형위성 전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소형 발사체를 제작·창업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품이 많아 부품업체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보좌관은 이 같은 전망을 전하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주 선진국 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우주발사체 개발 활성화가 한국판 뉴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보면 결국 5G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장기적으로 보내는 데이터가 많아지는 초연결시대가 될 것이고 위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한 위성) 대위성, 소형위성, 통신위성일 수 있는데 소형 발사체 기술이 활용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당정청, 오늘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협의… 입법사안 점검

“20대 국회에서 폐지된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점검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주제로 당정청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경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부 혁신과 국내 정보 차단 등이 이뤄졌지만 20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확립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당정은 국정원 개혁을 포

함해 지치경할제 등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청협의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법제화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지금, 당장!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9일 전북도의회 입구에서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전북도의회 차별금지법 건의안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민주, 부동산 입법 속도전

임대차법 상한제 등 오늘 본회의 처리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만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들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전·월세신고제) 개정안, 기획재정부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중부세법) 개정안, 그 외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등은 내달 4일로 예정된 본회

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입법이 시급한 만큼 가능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계약 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이전의 5%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뉴시스

통합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여투쟁 방안 고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장내의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의투쟁이라는 게 금방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식 영유아를 위한 제1차 토론회’에 참석한 뒤 뉴시스 기자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후반기 원 구성 진입 실패’ 일부 김제시의원들

또 다시 임시회 ‘보이콧’... 의회 파행

김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진입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5명과 민주당에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또 다시 집단으로 본회의에 불참해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29일 오전 10시 제242회 임시회를 개최 했지만 김복남, 김영자(기선거구),이정자,오상민 노규식 등 민주당 소속 의원5명과 박두기 무소속의원 등 6명이 건강상 이유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주현의장은 임시회의 5분 만에 정회를 선언, 11시 다시 회의를 진행 “의결정족수 미달로 더 이상 회의의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언 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와 ‘2020년 3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포함한 16건의 상정안이 민주당 의원 불참 보이콧으로 단 한건도 처리 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쳐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로 고스란히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